

# 위험사회와 성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

유 문 무\*

## < 목 차 >

1. 머리말
2. 현대사회의 진단
3. 한국사회와 위험구조
4. 안전사회를 향하여
5. 맺음말

## 1. 머 리 말

1980년대 중반 벡(U. Beck)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환경위기를 비롯한 서구 선진 산업사회의 위험과 이것의 생성 및 전개구조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론은 독일은 물론이고 전세계 사회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는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라는 대형참사가 '위험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형참사와 재난들이 이어지면서 '위험이론'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1986), 체르노빌 원자로 누출(1986), 엑손발데즈 유조선 침몰(1989), 도쿄 지하철의 사린가스 살포(1995),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1995),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로 누출(1997),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공격(2001), 우주왕복선 디스카버리호 폭발(2002) 등은 대형재난 발생의 잠재력이 현대문명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서구사회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론이지만 '위험사회'론은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인류의 편의를 위한 과학기술 문명 자

---

\* 인천대학교 국민윤리학과 초빙교수, 사회학 박사

체가 바로 위험사회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과 한국사회만의 독특한 산업화정책을 감안하면 위험과 관련된 앞으로의 사회변화 방향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수대교 및 삼풍아파트 붕괴와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사회도 산업사회에서의 위험과 안전을 주제로 하는 사회학적 이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서구의 200여년에 걸친 근대화의 역사를 불과 20여년으로 단축시켜 시행하였고, 전근대적, 근대적, 후근대적 형태가 함께 하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병존'상태를 초래하였다.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산업화의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위험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못한 채 사고와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로 인해 사회 제부문이 왜곡되어 발전하는 특성과 맞물려 한국사회는 이중 삼중의 복합적 위험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사고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과 재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사후약방문 격이며, 사회적으로도 매스컴을 통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며 안전성의 재확보를 약속하지만, 대형참사는 곧 다른 사회문제들 속에 묻혀 버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심은 다시 일상생활로 향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과 사회는 산업사회의 곳곳에 내재된 위험들에 대해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파악하는 일군의 학자들 -루만, 하버마스, 기든스, 백- 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단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특수한 산업화를 일구어낸 한국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의 위험수준, 어떤 형태의 위험구조를 안고 있는지를 '파행적 근대화'를 키워드로 하여 찾아본 후, 결론적으로 안전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그 연구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현대사회의 진단

### (1) 루만 (Luhmann)

18세기 들어 근대로 진입하게 된 서구 사회의 가장 큰 변화가, 사회의 제부문들이 전문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사회적 체계화'와 '기능적 분화'인데, 루만은 이러한 사회분화의 이론을 기능주의적 체계이론으로 현실사회에 맞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의 사회이론은 '분절적 사회에서 계층적 분화를 거쳐 기능적 분화'로 축약되는 사회진화론이다. 즉 선사시대 사회에서는 분절적인, 그리고 전통적 사회에서는 계층적 분화형식이 지배한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기능적 분화가 사회발전의 지배적 원리로 자리를 굳히는데, 이렇게 진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복잡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Luhmann, 2002:39-40)

계층적인 사회에서 기능적인 분화로의 이행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병존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도 계층화 및 분절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 기능적 분화의 결과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다양한 기능체계로 분화된 현대사회는 더 이상 '중앙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며, 자율성과 새로운 형태의 자기조종 능력을 갖춘 다수의 자율적 체계들이 출현한다. 이런 입장에서 루만은 생태위기와 같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즉 “왜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생태학적 위협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그 내적논리로 인해 발생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사회의 논리란 바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한 다른 질서를 통해 대체할 수도 없는 사회질서 형태 곧 중심기관이 없는 기능적 분화에 따른 논리를 말한다 (Luhmann, 2002:13-14).

루만에 따르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회체계는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자들의 선택을 통해 환경과의 경계를 형성하면서 자기생산체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체계는 의사소통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폐쇄적, 순환적 체계이다. 사회는 다른 아닌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사소통에 의한 의사소통의 재생산을 진행하면서 다른 종류 체계의 환경과 경계를 짓는다.

이런 방식으로 진화의 복잡성이 증대된다. 그런데 루만에 따르면 사회는 발전초기

단계부터 환경을 변화시키고 파괴시켜 왔지만, 오늘날은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생태학적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생산하는 정치 체계의 수단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강요하므로, 그는 정체체계의 기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루만에게는 정치든 사회운동이든 체계의 전체성을 체계내에서 확립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사회는 분화된 단위로서만 환경에 반응할 수 있기에 부분체계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루만은, 하버마스가 주장하듯이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생태학적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사회전체의 일반적인 합의가 전제되는 '규범'이 부재한 시대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불안'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있다. 곧 불안은 생태학적 위협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들이 체계내에서 주제화되는 방식을 보여준다(Luhmann, 2001:200-201).

과학기술 및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기능적 분화와 복잡성의 증대가 이루어진 현대사회는 각각의 기능 체계들이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협부담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위험은 결정의 당사자가 자신의 결정 여하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현대사회는 지식 및 기술발달을 통해 이 결정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은 양가적이다. 현재에서는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합리적 결정이 미래의 합리성을 보증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성에 의지하지만, 합리성이 오히려 위험의 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Luhmann, 2001:69).

예를 들면 에너지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주었고, 산업화와 자연개발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로 인해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합리성의 역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체계의 운명이다.

루만에게서 현대사회는 복잡성의 증대에 따라 분화된 기능적 체계들로 인해, 생태학적 위협과 위험을 알면서도 총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분적 합리성들에 만족하면

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은 결국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폐쇄적 체계들의 우연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전체사회를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태학적 위협과 위험의 극복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고 하겠다.

## (2) 하버마스 (Habermas)

하버마스는 루만의 체계이론적 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와는 달리 현대성 비판의 규범적 준거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틀에서 생태학적 위험을 다루면서, 생활세계 속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위험 극복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대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하버마스는 계몽사상에 의해 대변되는 서구 모더니즘의 계획을 오늘날의 현실세계에 맞게 재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더니즘 계획은 과학, 도덕, 그리고 예술이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 도덕적 진보, 나아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 믿었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결국 과학·도덕·예술의 각 영역은 전문직업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져 모든 문제가 특수 전문가의 관심사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인지적-도구적, 도덕적-실질적, 그리고 미학적-표현적 합리성의 구조들이 숙련된 전문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유형의 문화적 합리화로 인해 일상세계는 더욱 궁핍화의 위협에 빠져들게 되지만,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이러한 병리현상을 제거하자는 주장을 전개한다(Habermas, 1991)

사회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이루어지는데, 체계는 경제와 관료 행정의 영역이 대표하는 공간이며, 생활세계는 상징적으로 구조지워진 일상적 실천의 영역이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은 생활세계의 구조적 분화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생산과정을 생활세계의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분리시키게 된다.

자족적 하위체계로 독립한 경제와 관료행정 영역은 대상에 대한 도구적 제어에 전념하며, 행위자도 조작의 대상으로 화한다. 그 결과 체계는 의사소통에 수반되는 성찰

적인 일상적 실천으로부터 멀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생활세계의 지평을 파괴하려 한다.

하버마스는 이처럼 현대사회의 위기를 목적합리적인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로 파악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위기를 일면적으로 생활세계의 합리화과정 또는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

현대성의 병리의 핵심은, 화폐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체계의 논리 곧 경제 및 관료행정이 생활세계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곧 화폐와 권력을 매체로 한 체계의 도구적 합리성이 상호이해와 합의라는 생활세계적 맥락과 그 통합구조를 침범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의 병리인 것이다(Habermas, 1994).

그렇다면 왜 의사소통적 행위영역인 생활세계가 체계의 성공지향적 행위에 의해 쉽게 식민지화 되는가?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일상적 의식이, 분화된 생활세계를 종합하는 힘과 활동력을 상실하면서 파편화된 의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의식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의 원동력이자 사회진보의 합법적 근거로 간주되는 과학과 기술에 쉽게 굴복한다(Habermas, 1991:33-35).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성' '전문성'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의심없이 쉽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합법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파편화된 일상의식은 과학과 기술의 전문성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마치 제국주의가 원시사회에 침입하여 그들에게 동화를 강요하듯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 이데올로기보다 저항을 덜 받음으로써 부드러운 지배, 오래가는 지배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대중을 탈정치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 이론은 루만처럼 생태학적 위협이나 위협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루만의 체계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드러내 준다. 루만에게서 생태학적 위협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분화된 자기생산적 부분 체계들에만 전이된다. 따라서 생태학적 위협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분화된 자기생산적 부분 체계들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Habermas, 1991:140).

루만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 역시 각 기능 체계들 속에서 특수한 코드와 프로그램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위협이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은 부분 체계들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그것이 바로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체계의 운명이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상호 충돌하는 다양한 생활세계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공론장은 다른 공론장을 지시한다. 이 공론장에서 전체 사회는 자신에 관한 지식, 즉 반성적 지식을 형성한다 (Habermas, 1989).

하버마스에게서 의사소통은 체계의 합리성이 낳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전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 결국 후기 산업사회에서 왜곡된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되살리려는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과 평화운동 등으로 표출된다. 즉 삶의 질, 동등권, 자아실현,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인권신장 등의 부문으로 관심이 모여진다. 이러한 사회운동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은 의사소통의 재활성화에 대한 욕구이다. 바꿔 말하면 생활세계와 체계사이의 전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Habermas, 1991:15-160). 원전 반대 움직임, 소비자 운동,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운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등은 모두 체계의 원리가 생활세계의 기반을 침탈 붕괴시키려는데 대항하는 풀뿌리 저항운동의 생생한 실례들인 것이다.

하버마스에게서 새로운 사회운동은 체계가 전가하는 생태학적 문제나 위협들로부터 생활세계를 방어하는 적극적인 힘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부분적 합리성을 증대하는 중심적 조정장치인 것이다. 이처럼 하버마스는 현대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조정이나 사회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루만과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루만의 체계이론은 기능적 하위체계들로의 분화로 인해 부분체계의 반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 합리성의 추구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변증법과 자기반성, 그리고 해방간의 관계를 재발견함으로써 고도로 발달한 기술문명의 지배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현실을 정당화하는 실증주의적 사고에 의해 사라진 비판 의식을 구제하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배관계를 지양하기 위해서 공공여론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구조를 사회전반에 확장하기 위한 하버마스의

시도를 이해할 수 있다.

### (3) 기든스 (Giddens)

기든스는 현대성에 대한 제도적 분석에 주목하면서, 현대사회가 탈현대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기보다는 현대성의 결과들이 더욱 급진화되고 보편화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기든스는 현대성의 이중성을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질주하는 대형트럭'(juggernaut)에 비유하고 있다. 이 트럭은 안전하게 통제되면 잘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과 통제 한계를 벗어나면 질주 끝에 산산조각이 날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존재론적 안전과 실존적 불안이 상충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Giddens, 1991:145).

이러한 관점에서 기든스는 '탈현대성'을 비판하면서 '급진화된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안전 대 위해, 신뢰 대 위협이라는 현대성의 양면성을 네 가지 제도적 차원- 산업주의, 자본주의, 감시(행정적 집중화), 군사력(폭력 수단)에 대한 통제)-에서 분석하고 있다. 산업주의는 기계의 발명과 자원의 이용에 따라 자연을 변형시켜 '인위적 환경'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하여 경쟁적인 노동과 상품시장 안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제도이다. 감시는 행정적 집중화를 통한 정보의 통제와 사회적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군사력은 폭력수단의 독점과 전쟁의 산업화라는 맥락에서 폭력수단의 통제를 일컫는다(Giddens, 1991).

이 제도적 차원들의 배후에는 현대적 역동성의 세 가지 원천, 즉 시간과 공간의 분리, 이탈(disembedding), 그리고 성찰성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보면, 현대성의 팽창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달력과 지역을 가로지르는 시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탈은 사회적 관계를 지역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풀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기든스는 이러한 이탈 메커니즘으로 화폐와 같은 '상징적 징표'의 창안과 '전문가체계'의 확립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추상체계'(abstract systems)라 부른다. 사실 그에게서 화폐와 전문가체계는 현대사회에서 안전과 위해, 신뢰와 위협의 문제를 해명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들이다. 화폐와 전문가체계는 모두 분리되어 있는 시간-공간을 가로지르며 기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성찰성은 모든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특성으로서, 특히 현대성의 특징은 전반적인 성찰성을 가정하는데 있다고 본다(Giddens, 1998).

이러한 현대성 세 원천들은 기든스가 '탈현대주의'(post-modernism) 주장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 현대성에 대한 기든스의 주목할 만한 공헌은 현대의 상황을 탈현대성이 아닌 후기(late) 또는 '급진화된' 현대성으로 이해하자는 제안을 함에 있다. 즉 현사회는 현대적 제도와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현대성과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헤게모니가 점차로 쇠퇴하고 현대적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세계화는 현대성의 이런 급진화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화는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새로운 방식을 구조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성의 제도적 특징을 탈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기든스는 지구화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탈현대 질서의 규범적 윤곽인 자본주의, 산업주의, 군사적 힘, 감시체제에의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 네 가지 제도들은 현대성의 역동적 원천들로 인해 역사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은 바로 '지구화'이다. 지구화는 시공간적인 확장 과정을 의미하며 지구 전체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역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대성의 네 제도들은 지구화의 차원들로 확장되면서, 그것은 각각 국제적 노동분업, 세계 자본주의 경제, 민족국가 체계, 세계 군사질서의 특징을 갖는다(Giddens, 1991:50).

한편 추상체계의 확장에 따라 지구화되고 있는 현대성의 제도들에서도 위험은 증대하고 있다. 핵전쟁의 가능성, 생태학적 재난, 인구폭발, 지구적 경제교역의 붕괴, 그리고 잠재적인 지구적 대재앙 등은 무기력하게 하는 위험들의 지평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기든스는 현대사회가 위험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현대사회와 다르다고 본다. 현대사회 체계는 위험을 통해 구성되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현대성의 위험들에 대한 네 가지 적응 양식들-실용적 수용, 일관된 낙천주의, 냉소적 비관주의, 사회운동-이 있다고 보면서,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상존하는 현대성의 강도 높은 위험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붕괴, 생태학적 붕괴와 재앙, 핵전쟁과 대규모 전쟁, 전체주의 권력의 성장들이 그것이다. 미래 유토피아는 이에 대항하여 후기 절약 체계와 사회화된 경제조직, 기술의

인간화와 지구보호체계, 탈 군사화와 전쟁의 극복, 다층화된 민주적 참여와 통합된 세계질서의 가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급진적 참여 양식으로서의 사회운동은 잠재적인 미래의 변형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데, 특히 생태학적 운동은 산업발달이 초래한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 자각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Giddens, 1991:119-121 ; 정태석, 1999:27).

#### (4) 벡 (Beck)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비롯한 안락한 개인적 삶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원천이 기술공학이라 본 벡은 이로 인해 결국 거대 기술공학적 지식에 종속된 현대산업사회의 모습을 위험사회라 지칭하였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는 높은 생산성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계속 개발·발전되는 기술이 안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현대인은 무감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벡은 위험사회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위험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있다(Beck, 1998:54-57). 이는 단순히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대성의 자기해체 또는 재귀적 현대화라는 현대성의 모순적 발전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벡은 '고전적 산업사회'와 '새로운 형태의 산업사회', 즉 '산업사회'와 '위험사회' 간의 단절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현대성의 내적인 연속과 단절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산업사회가 결핍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의 생산 및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면, 위험사회는 부의 생산이 초래하는 위험의 생산 및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의 위험들은 산업적 과잉생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빈곤,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같은 초기 산업사회적 위험들과 달리 계산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산업사회 초기의 위험들과 달리 보험조차 불가능하다. 벡은 위험과 부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위험의 특수한 성격 '초계급적 보편성', '비가시성과 사회적 구성성' '지식 의존성' '상업성' '정치적 폭발력'-에 주목하고 있다 (Beck, 1997:57-59).

우선 위험은 '초계급적인 보편성'을 지닌다. "결핍은 위계서열적이고,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객관적으로 위험은 그 범위 내부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화 효과를 보여준다." 온실효과가 좋은 예가 되고 생태재해와 원자핵 진은 국경을 무시한다. 부자와 권력가라고 해도 이것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사회는 세계적 위험사회이다(Beck, 1997).

또한 위험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위험의 규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대중매체, 과학자, 법 전문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이 된다. 이는 곧 위험의 '지식 의존성'과 연관 될 수밖에 없다. "건강을 해치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으며, 겉보기에 쉽게 구분되는 곳에서조차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하다"(Beck, 1997:63). 그래서 "위험의 결정에는 학문분과, 시민집단, 공장, 정부와 정치 사이의 거리를 넘어선 협조가 요구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적대적인 규정을 제출하고 자신의 규정에 따라 투쟁하는 경우가 흔하다"(Beck, 1997:66-68). 이처럼 지식에 의존하는 위험의 특성으로 인해 위험의 규정에서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이 분쇄된다.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서로 결합하며 또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사회의 규정관계는 위험의 규정을 둘러싼 적대와 갈등의 관계이며, 이것은 곧 '정치적 폭발력'의 기반이 된다. 이제까지 알려져 온 현대화의 기초는 의문시되며 이러한 의문은 합리성들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벡은 나아가 이 위험이 '개인적' 위험, '특정집단'의 위험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지구전체에 퍼져 나가는 지구화의 경향을 지닌 '전사회적·지구적' 위험에 주목한다(Beck, 1997:44 ; 2000:66-67). 생태적 위험과 고도기술의 위험은 산업시설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든 생명의 자기파멸의 위험인 것이다.

여기서 벡은 위험사회로 규정된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으로 성찰적 근대화를 제안한다. 사회가 근대화될수록 행위자는 자기존재의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신뢰를 보내는 벡은 근대화과정이 일단은 산업화에 의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본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어 그는,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위험의 실상을 겉으로 드러낸 후, 이를 제대로 파악

하여 그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대응책을 찾는 노력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축소되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위험에 대한 바른 인식은 근대 이후 인류를 꾸준히 계몽해 온 이론을 제시한 학문과, 실제의 행동을 주도한 정치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즉 체계적으로 지식화 되는 현대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주체를 새로운 정치와 학문에서 찾았으며, 이 새로운 풍토가 풍미하는 근대화를 성찰적 근대화라고 하였다. 즉 성찰적 근대화란 자기의식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자기사회에 대해 지식을 비판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산업사회 시대의 창조적 (자기) 파괴 가능성'이 열림을 의미한다(Beck, 2000).

곧 현 사회에 내재된 위험의 가공할 만한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 종래의 단선적이고 맹목적이던 근대화에서 성찰적 근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지며, 지금이 위험사회라는 인식 자체가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더 이상 위험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역사적 행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벡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로 몰고 간 배후인 '기술 진보'와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의 논리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위험을 생산해 온 자본주의 문명의 경제적 추동력을 간과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위험사회가 출현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경제적 결정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거나 환상일 뿐이다. 따라서 성찰적 근대화가 진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 사회체제와 사회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5) 정리·평가

우선 전반적인 이론들을 비교해 보면, 루만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라는 틀 속에서 생태학적 위험을 체계이론에 통합시키려고 한 반면, 하버마스는 생태학적 위기나 위험의 문제를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체계-생활세계 이론을 통해 루만의 체계이론을 비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루만과 하버마스가 환경/체계 또는 체계/생활세계라는 일반적인 문제들 속에서 생태학적 위기나 위험의 문제를 다소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든스와 벡은 현대사회의 역동성 속에서 생태학적 위기와 위험이 전개되어 가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근대화와 관련하여서는, 기든스는 현대성의 연속성에 기초하여, 위험을 급진화된 현대성, 고도 현대성, 후기현대성의 틀에서 보고 있다. 반면 백은 단순 현대와 재귀적 현대 간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위험의 새로운 성격에 주목한다. 기든스가 신뢰와 위험을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루만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안전 대 위해, 신뢰 대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성 발전의 결과들을 논의하고 있다면, 백은 근대화의 기초와 근대화의 결과가 대면하는 '재귀적 근대화'의 성격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기든스가 전통과 현대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여 근대성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후기 근대의 위험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백은 산업적 현대와 재귀적 현대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위험사회를 재귀적 현대에 위치시키고 있다. 백은 위험사회와 하부정치에 관한 이론을, 기든스는 위험과 신뢰의 개념을 근대의 탈 전통 상황과 연결시킨 이론을 각각 제시한다.

성찰적 근대화에 대하여, 기든스는 능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체계'와 '제도적 성찰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백은 위험사회를 초래한 구조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다. 성찰적 근대화의 매체로는 기든스가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 지식, 그리고 일상적 지식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들고 있는데 반해, 백은 오히려 비지식,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들의 고유한 역동성을 매체로 들고 있다. 성찰적 근대화의 결과에 관해서는 기든스는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을, 반면 백은 개인화를 강조한다. 기든스가 현대화의 과정에서 개인들의 성찰성 또는 반성능력이 증대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백은 현대화의 산물들이 현대화 과정과 끊임없이 자기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위험사회이론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해명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갖는 근대성 발전의 특수한 조건들을 밝히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한국 사회는 단순 근대의 위험과 재귀적 근대의 위험이 복합되어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 실업, 노령화와 같은 산업적 위험들에 대한 안전장치, 즉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위기 등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감수성 역시 약하다. 즉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재귀적 근대화로서 위험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의 불균형적 저발전으로 인해 산업사회적 위험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위험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아직 계급불평등이나 복지의 저발전 등 산업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현실에서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재귀적 근대화의 과제를 해결하기란 실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위험사회이론이 단지 사회현상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여러 측면들과 삶의 구성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현실파악을 위해, 한국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과 지구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질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한국사회와 위험구조

#### (1) 파행적 근대화

한국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에 이를 만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이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단일목표에 집중된 결과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위험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대단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약 10여 년 간에 발생한 다음의 사고일지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신행주대교 붕괴(1992년 7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1993년 1월), 구포역 열차 전복(1993년 3월), 예비군 부대 폭발사고(1993년 10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1993년 7월), 서해 웨리호 침몰(1993년 10월),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충주호 유람선 화재(1994년 10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1994년 12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1995년 4월), 삼풍 백화점 붕괴(1995년 6월), 고성산불(1996년 4월), KAL기 팜 추락사건(1997년 8월), 씨랜드 화재사건(1999년 6월), 인천호프집화재사건(1999년 10월), 중국항공기 김해 추락사건(2002년 4월), 태풍 루사 피해(2002년 8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2003년 2월), 여기에 열대야현상, 다이옥신 파동, 광우병, 사스 공포까지 곁들이면, 실로 우리는 '위험의 일상화'에 포위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국경제는 최근까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량적 경제성장을 가능한 한 빨리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돌진적 성장'(rush-to growth)을 추구해 왔다. 지난 30여 년

간에 걸쳐 수출에 의존한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은 곧 돌진적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60년에 3,000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였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971년에는 100억 달러, 1988년에는 500억 달러, 그리고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쌓아 갔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1984년부터는 경공업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는 총 수출의 70.3%에 달하게 되었다.

이 돌진적 성장은 매우 급속한 산업화를 수반하면서,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경제의 중심이 2차 산업으로 이동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며,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힘입어 한국 사회도 상당히 국제화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룩된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1)불균형 성장, (2)불균등 발전 (3)고압의 정부주도 성장 (4)시민사회의 피폐화라는 특징을 지닌 ‘파행적 근대화 Limping modernization’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서구에서 20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전통적 근대화가 (1)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산업화 (2)정치적인 수준에서의 참여의 확대 및 민주화 (3)사회적인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가치체계의 도입 및 확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대화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근대화는 대단히 일탈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근대화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향운동을 의미하며, 이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근대화는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전적 또는 전통적 근대화라고 한다면, 민주화와 합리화를 결여한 산업화는 기껏해야 ‘절름발이 근대화’의 궤적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주도적 목표가 ‘개발독재’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면서, 근대화 추진에 따른 각종의 부작용들은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억압은 적어도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의 출범이래 크게 완화되었으나 민주적 절차는 여전히 무시되어 ‘문민독재’의 권위주의는 여전히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하였다.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가치체계의 도입과 확산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그 자리는 이른바 ‘군사문화’가 차지하게 되었다. 군사문화와 결합된 돌진적 성장은 군사 작전하듯 ‘안되면 되게 하라’와 ‘하면 된다’라는 구호아래 산업화를 집중 ‘공략’하면

서, “대충대충” “빨리빨리”하면서도 결과만 나타나면 된다는 ‘터보 근대화’적 몰신주의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속성상 파시스트적 성격을 지녔던 군사문화는 전근대적 혹은 반근대적 근대화를 떠는 ‘폭압적 근대화’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가 압축주의, 강제주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갖게 하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한다. 압축주의는 한국에서 근대화가 성과주의, 외형주의로 추구되었음을 의미하며, 강제주의는 개발독재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시민사회의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특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폭압적 근대화는 당연히 위험 문제를 경시한다. 경제적 생존논리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압도하고, 식민주의의 연장으로서 근대 과학주의가 국가 엘리트를 매개로 사회 전체를 압도한다. 파시즘은 겉으로는 엄청난 소신과 결단을 피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책에 골몰한다. 각종 개발 계획이 남발되는 ‘토목 공화국’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가 주도한 모든 토목 사업의 진정한 문제는 언제나 정치의 문제였으며, ‘토목 공화국’이 ‘사고 공화국’으로 전락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의 단초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공화국’ 지향은 개발지상주의로 이어져 우리사회 곳곳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요컨대, 한국의 개발주의는 경제성장을 지배적인 논리와 가치로 설정하는 반면 국토 개발을 단지 경제적 가치 창출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만 설정하였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국토환경을 파괴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성장-개발 지상주의 경제를 국가가 앞장서 이끌어 가는 동안,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개발주의로 물들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개발전망이 밝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 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불법건축물, 주변 경관과 관계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린 나홀로 건물, 공공장소들의 불법점유 및 불법 변경 등, 이들 모두 개발주의에 물든 우리의 의식 양태를 잘 보여준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의 성향은 국토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오염되는 데서 그 백미를 드러낸다. 특히 도시 인근 지역에서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은 개발에 따른 단순한 환경파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환경전반을 유기적으로 해체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즉 난개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무질서한 개발 자체보다, 산과 하천이 사라지고 녹지축이



단절되며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등 생태계 순환의 단절로 표출되는 국토환경의 유기적 파괴에 있다.

결국 이론적으로 보아 전통적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가 위험사회라면, 파행적 근대화가 가져오는 사회는 결코 단순할 수가 없다. 즉 근대화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밟아 온 파행적 근대화는 한편으로는 근대화에 따른 위험과 동시에 근대화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파행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사회의 위험은 당연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돌진적 근대화에 따른 '이중적 위험사회'라 할 수 있다.

## (2) 부패와 불신의 구조화

위험사회는 순간 순간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의 지속성으로 특징된다. 전통적인 위험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초래되었기에, 과학적 모델로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위험의 환경이 바로 사회제도의 중심에 내재한 상태가 되었다. 즉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은 이제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위험은 더 이상 기술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제도적, 정치적 문제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기술적으로 튼튼하고 훌륭한 건물들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다. 그런데 왜 정작 모국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여기서 정경유착과 부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1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공직사회가 “거의 또는 별로 부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3%에 불과하다. 반부패국민연대가 2003년에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의 투명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3년 세계 부패 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에서도 이와 상응하게 한국 국민들 중 응답자 84.1%가 개인 및 가족생활에 대해서, 또 86.6%가 문

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부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지목된 핀란드의 경우 각각 14.4%, 46.6%의 응답자만이 부패의 영향을 긍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패공화국'(The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조사결과이다(김거성, 2004:211).

이 한국사회 부패의 중심에 1순위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정치집단이다. 반부패국민연대의 2003년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투명성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4%가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하였고, 세계부패보고서의 조사에서도 정치부패가 한국 국민들에게 최우선적인 극복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분야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차떼기'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LG와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불법선거자금으로 수백 억 원의 현금을 트럭 채로 주고받은 데서 나온 이 '차떼기'란 단어는 정치권의 부패를 요약해주는 '부정부패 관련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SK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와는 승합차로, 또 삼성과는 월간지로 위장한 '책떼기' 수법으로 각각 현금 또는 채권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규모는 작지만 이들은 노무현 후보 진영과도 수십 억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처럼 상상을 넘는 고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현금으로 준비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들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2004년 2월 현재 각종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이 20여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었던 바 있으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권력핵심부가 외부적으로는 '사회정화'나 '정의사회구현' 또는 '부패와의 결전' 등의 구호를 제시하였지만 실은 그들 스스로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부패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부정과 비리와 함께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政經 癒着)'이야말로 정치부패의 정확

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소수 재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들로부터 쉽게 정치자금을 얻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래 특정 재벌들에 대한 무한대의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대신 집권세력은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자금 루트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공생공영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혼인동맹을 형성하면서 더욱 고착화된다. 한국 100대 재벌의 딸이 소위 고관 자제에게 시집간 비율은 26%, 100대 재벌의 아들이 고관의 딸과 결혼 한 비율은 33%에 달한다. 정치인과 기업가가 혼인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공생하는 부패구조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은영·박원순, 2002:88).

정경유착을 대표하는 소위 '비자금'(slush fund)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불법 관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 1997년 한국에서 이른바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배경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재벌의 결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이던 한보그룹이 당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권력층과 유착하여 5조 7천 억 원에 이르는 권력형 금융부정과 특혜대출 비리를 저지르고 부도를 냈던 것이다.

결국 이는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른바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신용평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쳐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재벌은 이런 부정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뇌물과 불법적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권력은 이러한 비리를 알선 또는 비호해 주는 부패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에는 관료사회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자율성은 증대되어 가지만 이에 맞물려 책임성이 함께 높아지지 못함으로써 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들도 꼬리를 물고 있다.

2004년 2월 현재 구속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숫자만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강한 인사권을 무기로 진급 청탁 등과 관련하여 또는 각종 인허가, 공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 등을 받다가 적발되는 공무원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 한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로 받은 돈 3억 여 원을 관리해오다가 적

발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심지어 모 시청의 국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교량보수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건설회사로부터의 청탁과 더불어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천 만원의 뇌물을 쇼핑백으로 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중앙행정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부패한 부처로 꼽혔으며, 이어 농림·국방·환경·노동부 등의 순으로 청렴도가 낮았다. 청 단위로는 국세청과 검찰청이 부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사고의 이면에는 이러한 부패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속성이다. 삼풍백화점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에서부터 불법으로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하기까지 거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청과 구청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다시 낮은 가격에 재 하청을 하므로 최종적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은 턱없이 부족한 건설비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재를 빼돌리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탈법을 일삼게 되었다. 결국 공적 자원을 사유화한 결과 체계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경유착의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사정기관이나 감시해야 할 언론부문 자체의 부패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법부문의 경우 법조계 내의 부패도 극복되어야 할 문제지만, 국민들은 정경유착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고위관료 등 권력형 부패와 비리, 부정, 선거법 위반, 반인권적 범죄 등에 연루되었던 자들이 사면을 받아 석방되거나 형면제와 복권 등의 조치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경우들이 허다하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기관들조차도 부패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2003년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투명성인식 설문조사에서 부패한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언론의 부패가 정치부패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2002년에는 국세청이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여 일부가 구속되었다.

또한 그 특성상 어느 집단보다도 더 신뢰도가 높아야 할 교육 분야에서도 '촌지' 관

행이나 부정입학, 교수 임용과 관련한 비리, 사학재단의 각종 부정, 연구비 착복 등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몇 년 동안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등 교육감들이 각종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2004년 초에는 제주도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가 구속되었는데, 이는 교육감이란 직위가 일부 이권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감사원은 2004년 2월 초등학교 교장 18명과 교감 4명이 서울시교육청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해임 등 중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김거성, 2004:219).

요약컨대 이중적 위험사회로 나타난 한국은 파행적 근대화와 동시에 등장한 부패의 사슬에 얽혀 끊임없이 연속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이 부패의 중심은 권력과 재벌로 대표되며 이들은 소위 비자금을 매체로 정경유착을 형성한다. 부패의식은 점차 부패의 감시와 고발을 주업무로 하는 언론과 사법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국가권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극대화된다. 곧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와 불신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4. 안전사회를 향하여

### (1) 근대화성찰

백은 고도의 산업화로 인간의 물질 생활은 풍요롭게 되었지만 인간 사회는 공해와 생태계의 파괴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에, 이젠 산업화의 부작용에 눈을 돌려 '위험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즉, 생태주의적이고 창의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eck, 1997).

성찰적 근대화는 근대화에 대한 '근대적' 비판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서구 산업문명의 모순은 근대화의 성공이자 실패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창조적 파괴의 결과이다. 여기서 단순 근대화와 성찰적 근대화가 나누어진다. 전통을 근대화하는 것이 단순 근대이고 이 근대를 다시 근대화하는 것이 성찰적 근대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는 '근대의 근대화'라는 재귀적인 성격을 갖는다(Beck, Giddens & Lash, 1998).

기든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성찰적 근대화란 근대화의 두 가지 국면을 말한다. 첫번째 국면은 농경 사회를 산업 사회로 바꾸는 것이고, 두번째 국면은 생태적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들에 대응하는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기든스, 1999:269). 위험 사회론이나 성찰적 근대화론은 선진 산업 사회에 대한 문명 진단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위험한 세계로 치닫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한 제안이다. 선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위험은 어느 곳에든 상존하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성찰적 근대화의 원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3의 길’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나 원자력 사용 문제, 유럽 연합 문제, 지방 분권 문제 등은 좌우 이념 대립의 쟁점이 아닌 새로운 영역이고 따라서 좌우를 넘어선 ‘적극적 중간’(active middle)이나 ‘급진적 중도’(radical middle)라는 개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전후 복지 국가 모델은 ‘제1의 길’이고, 대처리즘식 자유주의 모델은 ‘제2의 길’이며, 이 두 노선의 역사적인 실험 결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절충하자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Giddens, 1999).

미국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장밋빛 미래의 세계화가 결코 아니다. 세계화는 시장과 자본의 세계화이고 사상·문화의 미국화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과정에 다름 아닌 시장 만능주의요, 시장 근본주의이다. 이 시장 만능주의의 폐단은 인류가 이미 자본주의의 생성, 발달을 거치면서 경험해 왔다. 고질적인 실업, 빈곤, 빈익빈 부익부, 주기적인 불황 등은 자본주의가 피할 수 없는 고질적인 모순들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 위험들이다. 세계화가 시장 근본주의의 확산이라면, 세계화의 진행은 곧 세계적 수준의 위험 확산이다. 요컨대 일국적 차원에서 위험 사회가 출현했다면 이제는 지구적으로 위험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각 국민 국가들은 생태학적인 위기, 이민,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 범죄, 재정 낭비, 세금 포탈, 인력 수출, 빈곤과 정의, 복지 상태와 연금 제도의 미래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단순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맞물릴 때는 이런 위험들은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위험사회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즉 ‘이중 위험사회’적 특징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위험사회’의 해결로 제시되는 ‘성찰적 근

대화'도 복합적 위험사회에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반세기에 걸친 발전이 서구의 근대화를 전범으로 하여 왔다는 점에서 성찰적 근대화는 우리 근대화의 전체모습을 살펴보는 데 유의할 수 있다. 우리의 발전에도 단선적인 팽창적 메커니즘에 의한 자기해체의 위험요소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 깊숙이 내재해 있다는 반성 이상의 성찰은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물론 기본적인 발전의 방향, 노선, 전략, 정책에 대한 담론과 실천의 장을 확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제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기대면을 가능케 하는 성찰적 합리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 학교, 그리고 조직과 개인 수준에서 아직도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직적 근대화를 통한 초고속형 발전은 매우 압축적인 만큼 전체사회의 여러 부문들 사이의 불균형과 파행성을 몰고 왔다는 점에서 불균등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지체,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체의 파괴와 집합적 가치의 훼손,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위기의 발생 등이 그 목록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반인륜적 행위, 생명 경시풍조 등도 그 표현이다. 이는 그간의 수직적 근대화에 의한 압축적 발전의 모순을 재귀적 발전에 의해 역동적으로 극복해야 할 이유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과정보다 결과, 내실보다 외형, 안전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성과주의·적당주의·형식주의·편법주의가 우리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하고 파행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위험사회의 표상이 되어 있음을 가리켜 준다.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에 비해 뒤쳐진 실질적 합리성을 신장하기 위한 성찰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

## (2) 부패의 단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시절보다는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차떼기'로 대표되는 대규모 부패나 '돈 봉투'로 대표되는 소규모 부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부패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의 소위 '급행료'나 교통경찰에게 건네는 '밥값', 명절 선물 꾸러미 등이 사라지고 있지만 부패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전반 곳곳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

다. 2003년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 기준으로 4.3점을 얻어 조사대상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처음 발표당시 4.29점으로부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김거성, 2004:210-211).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만드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인 정경유착과 부패가 지속되면 사회통합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고도의 전자통신기술로 통합 운영되며 동시에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경유착과 부패로 인한 사고는 사회 전체부문의 운영을 마비시킬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패문제에 대해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과거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반부패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부패문제가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방위 구성,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등의 '만병통치약'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대로 된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실천전략이 요청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반부패대책은 '공허한 구호'에서 시작하여 단발적 조치로 끝나곤 했다. '서정쇄신'이나 '정의사회구현', '윗물맑기운동', '부패와의 결전' 등을 내건 정권 초기의 기세는 일시적으로 반짝 진행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슬그머니 사라져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주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사면 등으로 반부패는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고 부패는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국 기존의 반부패전략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반부패전략의 기본방향이 요청된다(김거성, 2004 ; 신봉호, 2000, ;이은영·박원순, 2002).

첫째, 체계적이며 내실화된 시스템의 구축이다. 부패방지 법제의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영문 이름 (ICAC)만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와 같을 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도 없으며 업무의 독립성과 인사의 자율성도 뒤떨어진다. GDP 대비 부패방지 예산의 규모는 홍콩의 20분의 1에 불과한 형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도 계약추적권이 없으며 협의거래에 대한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제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내실화하며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부패통제 전략은 근본적으로는 부패유발 환경과 요인 대부분을 방치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 절차나 제도, 그리고 의식과 문화의 개혁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시급하다. 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자정부와 정보공개 확대, 시민감사청구제 활성화와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 행정 투명성의 증진이 독려되어야 하며, 시민참여의 확대 등도 부패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시민 음부즈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주민감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직자들 스스로의 자율적 부패통제 메카니즘의 확보가 요구된다. 소수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구 등이 다수의 '잠재적 부패행위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하에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부패를 방관하는 객체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 부패를 통제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부패를 적발해 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는 부패방지법을 통해서 공직자들도 부패감시의 주체로 나설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감시의 객체로서가 아닌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부패감시의 중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반부패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영정공서의 설치법률에는 부패추방을 위한 세가지 과제로 '조사 및 처벌' '예방' '교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특히 '예방'과 '교육'의 명문화는 부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반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제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책마련에 급급해하는 개별적 사안중심에서 벗어나 평소 국민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반부패문화 수립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학교, 사회, 공직, 기업 등의 반부패 교육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한 세부 실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 일회적 대책 대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반부패전략'을 중심으로 반부패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런 합의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장단기 실천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안별 부패에 대한 비판과 고발중심에서 벗어나 반부패를 향한 공공 분야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분위기는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며 부패 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에는 거의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 명심할 점은 과감하고도 총체적인 개혁노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는 많은 경우 체계적이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드러난 환부만을 건드려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기에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 (3) 사회자본의 증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물질적 자본, 인적자본과 대비되는 용어로,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신뢰(trust)'이다. 후쿠야마 역시 신뢰가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간주하고 있고, 여러 사회학자들은 '신뢰의 사회구조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콜맨은 보다 다차원적이고, 분명하게 사회자본을 신뢰와 연관시켜 정의하였다. 그는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사회자본을 정의한다. 즉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였다(Coleman, 1988:102-105).

사회자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신뢰, 호혜성의 규범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 곧 콜맨, 부르디외, 퍼트남 등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후쿠야마는 콜맨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사회·문화적 신뢰의 수준을 경제구조와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사회학적 분석들이 직업윤리라는 개인적인 행위동기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그는 경제활동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라는 사회적 덕목에 주목하였던 것이다(Fukuyama,

1995a:47 ; 1995b:91).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그는 먼저 '사회적 자본'의 크기, 곧 사회의 신뢰구조를 크게 둘로 대별하여 '고 신뢰 사회'와 '저 신뢰 사회'로 나눈다. 미국·일본·독일이 '고 신뢰 사회'의 전형적인 보기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사회의 도덕공동체는 경제학적 의미의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사회성'이라는 비합리적 습관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며, '저 신뢰 사회'의 전형은 중국·한국·이탈리아·프랑스이며, 이들 사회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공통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고 한다. 곧, 가족주의적인 저 신뢰 사회는 융통성, 관료제적 요소의 부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지만, '사회성'의 제한된 범위에서 비롯되는 폐쇄성 때문에 대규모 기업으로의 발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Fukuyama, 1995b:95-96).

신뢰는 크게 나누어 사적(개인적, 미시적,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적(사회적, 거시적, 제도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신뢰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로, 가족주의나 내집단 성원들의 관계처럼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확산에 가까운 신뢰를 의미한다. 공적 신뢰란 사회제도내의 제도나 체제 또는 기준 등에 관한 신뢰로, 주로 그것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실행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두 차원의 신뢰는 긴밀한 역동적 관계에 놓여 있다. 사적 신뢰는 공적 신뢰의 필요조건이어서 사적 신뢰의 축적양상에 따라 공적 신뢰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적 신뢰가 배타적으로 과당화하는 경우에는 공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기도 한다. 즉 사적 신뢰의 축적이 초래하는 '고착화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공적 신뢰의 토대인 경쟁의 원리 그리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위배되는 경향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위험사회에 이르게 된다(이재혁, 2000).

한국사회의 경우,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신뢰의 기반 대신, 새로운 유기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제도화된 신뢰'와 '도덕성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신뢰규범은 온존되고 오히려 강화된 반면, 공공영역에서 신뢰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여지는 급속히 약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변형된 가족주의의 공리주의적 열정은 자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 가치와 결합되어 산업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낳은 동시에 특수주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

의적 연줄망 원리로 변형되기도 하였고, 근대적 형태의 기업에서조차 가족주의적 소유 및 지배를 위한 운영논리로 활용되어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공공의 게임규칙을 왜곡시키고 성과 지향적인 기능적 합리성을 용인하는 부패의 연결망을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변형된 가족주의의 일차적 연대 의식은 서구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제도를 한국사회에 착근시키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혼재됨으로써 공공윤리가 성숙되기도 어려웠고, 보편주의적 가치를 전제로 한 근대적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이다(고병익, 1996: 355-356).

요컨대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적(제도적)신뢰의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공적 신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줄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적 신뢰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얼마 안되는 기본적인 공적 신뢰마저 부식시켜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가 인적자본과 화폐자본의 개발에는 주력했지만, 사회적 제도의 신뢰와 도덕성이 기반이 되는 '사회자본'의 형성에는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적 신뢰의 증진이 아니라, 공적, 제도적, 또는 관계적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열, 1998).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신뢰가 사회자본으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사적 네트워크와 제도 간의 갭을 좁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인 신뢰구조의 강화보다 공적신뢰구조의 취약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법 형식'의 구현은 사적 신뢰구조와 제도간의 '갭'을 더욱 넓히고 오히려 연결망적인 네트워크로의 이전을 지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 형식에 대한 지원보다 국민들의 '법의식'의 수렴을 통한 사회적 동의를 확립해 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속성은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에 대해 사회적 실체(개별 행위자들, 집단, 사회)들이 가지는 '공감대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바로 공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감대의 수준'을 높여 가는 과정이 신뢰형성의 과정이 되

며, 이것이 사회자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가 결여된 채, 전통적 사회적 자본의 개념인 사적 신뢰의 과잉과 그것의 남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니 만큼, '고 신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적 또는 제도적 신뢰의 증진 즉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혀 가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위자들이 높은 수준의 '제도적 신뢰'를 갖게 되면, 연줄망에 의존하는 경향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연줄망이 그토록 발달하게 된 것은 연줄을 통하여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다면, 연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획득하게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이 폐쇄적 연줄이 낳는 사회 분열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측 가능한 제도와 더불어 공정한 처벌 제도가 사회 전체의 협동을 키울 수 있어 막대한 불신 비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귀속적 네트워크와 성취적 네트워크, 또는 제도의 동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4) 시민운동의 활성화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시민운동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다. 하버마스에게는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적 왜곡이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오늘날 사회비판의 주된 동력은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불리는 움직임이 삶의 질, 동등권, 자아실현,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인권신장 등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성격이 한층 분명해진다. 이러한 사회운동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은 의사소통의 재활성화에 대한 욕구인 것이다. 원전 반대 움직임, 소비자 운동,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운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등은 모두 체계의 원리가 생활세계의 기반을 침탈 붕괴시키려는데 대항하는 풀뿌리 저항운동의 생생한 실례들인 것이다(Habermas, 1987).

기든스는 성찰적 근대화 단계에 있어서 시민 사회와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대한 정부를 줄이고 효율적 정부를 재창출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 사회의 재구성, 셋째는 정부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시장 중심적인 신 혼합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넷째는 인적 자원 개발과

위험 사회에 대한 적극적 처방으로 복지 체계를 재편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환경 친화적인 생산력 구축을 통한 생태적 현대화를, 여섯째는 세계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범세계적 관할 체계를 준비하자는 것이다(Giddens, 1998).

기든스가 강조하는 시민 사회의 강화, 세계 민주주의는 벡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문제의식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벡에 따르면 위험은 국민국가 틀 안에 존재하지만 초국가적인 문제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제기하고 해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초국가적 세계 정당이며, 이런 정당들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면에서 한 국가 내 운동체이자 동시에 세계적인 운동체로 활동을 하는 세계 시민 정당이므로 국제적 연대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Beck, 2000). 맑스가 산업자본주의 초기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를 외치며 노동자 국제주의를 주창했다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현재 벡은 위험 세계에 맞서 “만국의 시민단체여 단결하라!”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위험사회의 대안은 ‘시민 의식의 강화와 국제적 연대’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현재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민운동은 198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주로 국가 및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하면서 발전했다. 우리 시민사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을 대표하며, 시민운동은 소수지만 시민사회의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가시성이 두드러지며,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그 고유업무에 덧붙여 시민운동적 단일의제하에서 결집하는 형태론적 특징이 있다.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전체 사회의 핵심적 의제형성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소용돌이의 운동’은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역동성과 건강한 긴장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자원단체(voluntary), 자선단체(charity), 또는 비영리 섹터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조직되는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 즉 ‘시민운동형’ 방식으로 이해되고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운동은 나름대로의 취약성을 담고 있기도 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는 2만여 개에 달하지만, 극소수의 메이저급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는 그 활동이 매우 부실하다. 활동에 필

요한 인력의 부족은 물론 활동조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운동역량은 미약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운동의 불균형적 성장이 주원인이다. 여론을 환기하는 선전과 폭로 위주의 활동이 주요한 운동방법으로 정착되면서, 운동의 주체인 사람 곧 시민의 발전보다는 법과 제도의 개혁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메이저급 시민운동단체에는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풍부한 물적·인적 역량과 프로젝트들이 몰리는 반면, 사람과 지역 중심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우선 삶의 개인주의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사회 속에서 개인적 삶의 안전을 보증해 주는 고용, 건강, 교육, 환경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성찰적 관심과 대안제시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시민권을 공고히 하고 시민권의 부조화를 극복하는 주요한 성찰적 기제로 시민운동이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개선과 권력의 감시에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시민적 삶의 개방성, 다원성, 공공성을 신장함과 동시에 윤리적 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실천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다. 아울러 시민운동은 '소박한 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의 위치를 정치권력과의 권력게임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하고 정치적 이슈나 정책에 대한 감시나 투쟁에 모든 운동자원을 동원하기보다는, 권력과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해 좀더 성찰성을 발휘하여, 시민운동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자기점점을 일상화하고 시민사회내 활동공간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시민운동은 권력과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시민단체들 자체가 이익 집단화, 관료제화 될 경향의 억제방안 마련과도 연결되는 바, 자기비판 기능을 담당할 제어 기구가 상설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여성·주민자치·평화·국제연대 운동 등 부문운동의 활성화,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화된 시민운동 단체들의 연대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담론과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창출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당파성과 편향성을 극복하는 일이 시민사회의 각 영역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시민운동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진행되고 있는 제도 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방향타를 제시할 수 있는 보루로서, 그리고 참여하게 노정 되고 있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지역 및 계급갈등을 중재·해소할 수 있는 대안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시민운동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참여를 통한 도덕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즉 가족주의적 특수주의의 집단내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의 언어가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 게임의 규칙과 도덕적 합의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 영역의 분리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민적 자세를 확립하는데 주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한국의 역사적 지형 위에 시민윤리와 시민문화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일이며, 그것은 사회집단들 내의 '내재적 통합성'과 사회집단들 간의 '자율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주의적인 도덕 공동체적 연대의식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은 의식개혁과 재창출의 보루가 되는 동시에 전선구축의 중핵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 5. 맺 음 말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한된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단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 위주로 이용하는 산업화, 도시화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지위를 새로운 자연 개념으로 다시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 운영 시스템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1세기는 20세기의 사회 패러다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군이 위협사회와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고도성장을 위해 부차적으로 생각해왔던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 도시화·산업화는 인위재해의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가중요인으로도 작



용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없이는 어떠한 인위적 행위도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 위협의 진단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21세기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열려진 자기성찰적 태도를 갖고 지속가능한 건전사회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품은 채, 지역에 맞는 적절한 전환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실천은 정부가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지만 이제는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전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사회'를 중시한다.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기술적 해결이 제공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는 절박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긴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건전 사회는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복지체제를 통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은 예측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긴요한 역할을 한다.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될 때 사회통합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제 복지에의 투자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위험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전환하여 대중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건전 사회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능력과 도덕적 힘을 발전의 우선적 에너지로 고려하는 '참여사회'이다. 제3섹터인 시민운동의 잠재력은 매우 크므로, 국가와 기업 중심의 발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구 패러다임의 발전 주체였던 국가와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비판자의 위치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임현진, 2000:17-19 ; 박희, 2001).

위험사회는 위험이 모두 극복된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다. 위험사회의 극복 전망은 위험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과학적 합리성을 근원적으로 의문시하면서 생태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의 하부정치 또는 풀뿌리 정치는 위험에 대한 성찰과 위험 감소를 위한 거시적, 미시적 체계의 재구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국가복지의 확대를 통해 산업적, 자본주의

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근원적 의심을 통해 생태학적, 과학 기술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지구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복합적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현대화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물질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근대성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지름길은 '느림의 미학'을 향한 의식전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과 관행을 만들어 가는 문화적 혁신뿐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2000),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서울: 한울
- 고병익(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거성(2004), “한국의 부패상황”, 「부패에 반대한다」 이학로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남진(1995),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와 규제”, 「현대사회」, 제42호
- 김대환(1998),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사상」, vol 38
- 김성재(1993, 겨울), “체제이론과 언론연구: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통제”, 「언론과 사회」, 제2호
- \_\_\_\_\_(1996), “환경문제와 모험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제37호
- 김영평(1994, 겨울),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4호
- 김영호(1999), “정보사회와 위험사회의 성찰”, 「배재대 사회과학연구」, 제18집
- 김종길(1996), “‘위험사회’에서의 환경문제 발생논리와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제30집
- 김학성(1995), “산업사회와 위험사회 ;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제7호
- 박숙미(2002), “신뢰구조의 동학과 사회자본의 형성 : 위험생산-회피구조의 발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웅(2000), “사회적자본과 사회적 신뢰” 「비교사회」 제3호
- 박형균(1995),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행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인적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박 희(2001), “신뢰성 위기와 시민운동” 「담론201」 제10호
- 서규환(1995), “왜 비판 사회과학은 지금 더욱 비판적 이여야만 하는가 -위험사회 시대의 비판사회과학을 위하여”, 「세계의 문학」, 제78호
- 서문기(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5호
- 신봉호(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 대책”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

- 심익섭(2002.10),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 위기관리의 새로운 이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제51권 제588호
- 양종희·이시재 공역(1995), 「환경사회학」, 서울: 사회비평사
- 유팔무·김호기 엮음(1996),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이 연(2003),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학문사
- 이기홍·조재광·이강익 옮김(1997), 「지구환경과 사회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상희 편(1992),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길사
- 이은죽(2004), 「신뢰 : 지구촌시대의 사회적 자본」, 서울: 집문당
- 이은영·박원순(2002), 「부패추방 어떻게 하나」, 서울: 나남
- 이재열(1998), "대형사고와 위험 : 일상화한 비정상성", 「사상」, vol. 38
- 이재혁(2000), "위험과 신뢰 그리고 외부성 : 한국의 시민사회 사례", 「성균관대 사회과학」, 제39권 제2호
- 이홍균(2001), "위험사회와 반성적 근대화", 「사회비평」, 제27호.
- 임동욱(1996), '위험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 「언론연구」 제5집, 중앙대언론연구소
- 임현진(2000),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 「성균관대 사회과학」, 제39권 제2호
- 장경섭(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2
- 장윤재(2001), "위험사회와 잠종적 접근의 필요성", 「고대문화」, Vol. 53
- 전경갑(1994), 「현대사회학의 이론」, 서울: 한길사
- 정규호(1994),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정태석 (2002), "백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과 개인화의 딜레마", 「경제와 사회」 제55호  
——(1999), "위험사회의 사회이론" 「문화과학 35호」, 문화과학사
- 최종욱(1994), "현대사회의 위기와 위험사회의 현상학", 최종욱 외,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 한상진(1998), "왜 위험사회인가? : 한국사회의 자기반성", 「사상」, Vol 38
- 한형기(2000), "원자력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모형-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건국대사회과학연구」,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 홍성태(1994), "서평 : 성찰적 근대화, 현대 위험사회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길", 환경

## 과 생명 창간호(봄)

니클라스 루만(2002),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남복 역, 백  
의

————(2001), 『복지국가의 정치이론』 김종길 역, 서울: 일신사

닐 포스트만(2001), 「네크노폴리」, 김균 역, 서울: 한울

레스터 R. 브라운 외 저(1991), 「지구환경보고서」 김범철, 이승환 역, 서울: 따님

미트로트 & 피어슨(1994), 「기업위기관리」, 이재우 역, 서울: 웅진출판사

앤서니 기든스 (1991), 「포스트모더니티」 이윤희·이현희 역, 서울: 민영사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 역, 서울: 새물결

————(1998),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9), 「제3의길」 한상진·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 나무

앤서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1998),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 역, 서울: 한울

올리히 벡(1997), 「위험사회」 홍성태 역(1997), 서울: 새물결

———— (1998), 「정치의 재발견」 문순홍 역, 서울: 거름

———— (2000), 「지구화의 길」 조만영 역, 서울: 거름

위르겐 하버마스 (1991), 「비판적 사회이론의 과제」 최재현 편, 「현대독일사회학의 흐름」

————(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자크 엘루(1996), 박광덕 역, 「기술의 역사」, 서울: 한울

헬렌 조페, 박종연·박해광 역(2002),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서울: 한울

## 외국문헌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JS 94

Fukuyama, F., (1995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b), "Confucianism an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April.

Habermas, J.,(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Boston: Beacon  
Press

-----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 MIT Press

Hood, C and David, K C Jones (eds), (1996), *Accident and Design Contemporary  
Debates in Risk Management*, London UCL Press

Perrow, A. H, (1984), *Normal Accident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y*, New  
York Basic Books

Thomas Dietz, R. Scott Frey, and Eugene A Rosa,(2002) "Risk, Technology and  
Society" Riley E. Dunlap and William Michelso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Sociology* :Greenwood Press